

# 세월호 특별법

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.

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'4·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'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.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해양수산부는 '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'과 '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' 등 소관 법률 개정안 2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'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' 개정안에는 국가가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.

마지막 수정: 오후 4:31